

# 시민 의견에 방향 튼 광주시, 호남고속도로 확장 본격화

姜시장, 토론회서 주민의견 수렴  
4000억원 市 재정 부담금 우려 속  
시민 19명 중 16명 '확장하자' 주장  
사업 재추진...추경 국비 확보 노력

국·시비 예산 부담을 놓고 불거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자체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광주광역시와 시민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견을 수용하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관 거시기홀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긴급 시민토론회에서 "광주시 재정부담도 걱정이지만, 공사가 빨리 시작돼 교통정체도 풀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시민의 뜻에 따라 삭감된 호남고속도로 정부 추경 예산 367억원과 광주시 예산 400억원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동광주IC~광산IC·11.2km) 확장을 위한 추경 예산 367억원이 최근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표류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추진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자치구 의원, 주민자치위원,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호남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발표에 이어 참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오늘은 제 의견을 내기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겠다"며 "국회 추경 예산 심의가 이번 주 안에 진행되는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을 넘어 광주 북부권과 인근 산업단지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 동광주IC~광산IC 구간 11.2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광주 북구 용봉IC 개설 민원을 계기로 본선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5년 7월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약 체결 당시 2762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두 차례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소음저감 시설 설치, 물가 변동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2023년 9월 7934억원까지 늘었다.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설계비 정산액 67억원의 근거 제출을 요구하며 분할 납부(10년)와 전액 국비 지원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 예산에 시민 부담금 367억원을 편성하지 못했고, 국회도 국비 36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19명의 시민이 발언에 나섰고, 이 중 16명이 "예산을 어떻게든 마련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차동 상인회장은 "올해 초 착공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중단돼 시민들은 허탈했다"며 "세금과 지방채 부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운암동 주민은 "비엔날레 전시관 이전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용봉IC 인근은 교통지옥이 예상되는데 시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면에 계속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박병규 광산구청장 비야5일장 장보기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과 직원들이 1일 광산구 비야5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채소 등을 구입하고 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현장을 직접 체감하고자 실시했다. 김영배 기자

## 특검, 尹에 5일 출석통지... 불응시 체포영장

재차 불응시 강제수사 나설 듯  
'尹 외환유치 혐의' 본격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

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한 공기술연구원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

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을 비롯해 납품 과정과 경위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 기업의 지속성장 | 국토의 균형발전

## 지금이 기회! 기회발전특구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인센티브 |            |                                                                                                                                   |
|------------------|------------|-----------------------------------------------------------------------------------------------------------------------------------|
| 세제지원             | 소득세·법인세    |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br>·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
|                  | 취득세·재산세    | · 특구 이전시(최대 100%) · 창업시(최대 100%) · 공장 신·증설시(최대 75%) 취득·재산세 감면                                                                     |
|                  | 상속세        | · 이전기업의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업종변경 제한,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br>· 창업·이전기업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중견기업 전체) 및 공제한도 폐지<br>*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통과시 적용 |
| 재정금융지원           | 이자·배당소득세   | · 민간이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 · 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최대10% 가산)                                                                                                 |
| 규제특례             | 개발부담금      | ·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 규제특례       | · 지방정부가 규제특례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
| 정주여건개선           | 주택 양도세     | · 특구에 놓여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                  | 주택 특별공급    |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
|                  | 교육지원       |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

\* 개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주택특별공급 등의 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국회 통과시 적용

